



1. 서 론

17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주장과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성장을 목표 7%를 하겠다는 약속으로 당선되었다. 국제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경제는 지난 5월에 IMF에서 전망한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3.0%, 2.5%로 전망하였다.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이 내년에는 경제성장률 4% 예상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인 7% 경제성장률의 달성은 미흡한 실정이다. 국민을 섬기는 정부에서 국민들이 3% 경제성장률을 충당해 보자. 그리기 위하여 경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현황을 알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 경제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알기 위하여 세계경제포럼의 평가를 보면

가. 총괄 평가

올해 세계경제포럼에서 각국의 국가경쟁력 평가를 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작년보다 6단계 하락한 19위로 평가되었다. 3개 분야별 평가를 보면, 기본 요인 분야는 16위에서 23위로 7위가 하락하였고, 다음은 효율성 증진분야는 15위에서 20위로 5위로 하락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 혁신 및 성숙도 분야에서 10위에서 16위로 평가되어 6위가 하락하였다.

① 세부적으로 평가를 보면

먼저 기본 요인 분야에서는 세부적으로 제도적 요인 분야는 28위에서 53위로, 인프라 분야는 15위에서 17위로, 거시경제 안전성 분야는 4위에서 11위로, 보건 및 초등교육 분야는 26위에서 27위로 평가되었다. 다음은 효율성 증진 분야에서는 세부적으로 고등학교 및 직업훈련 분야는 12위에서 16위로, 상품시장 효율성 분야는 22위에서 36위로, 노동시장 효율성 분야는 41위에서 84위로, 금융시장 성숙도 분야는 37위에서 58위로, 기술 수용 적극성 분야는 13위에서 15위로, 시장 규모 분야에서는 13위에서 12위로 상승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 혁신 및 성숙도 분야에서는 세부적으로 기업 활동 성숙도 분야는 16위에서 21위로, 기업 혁신 분야에서는 9위에서 11위로 나타났다.

② 제도적 요인 분야에 대하여

제도적 요인 분야에서 28위에서 53위로 25위가 하락하였다. 이 분야에서 50위 이상한 분야만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 정책 변화에 대한 인지도 분야는 100위, 정부 규제 부담 분야는 98위, 소수주주의 이익보호 분야는 73위, 정부 지출의 시장 기능 보완 적절성 분야는 70위, 법체계의 효율성(규제 개선 측면) 분야는 69위, 정치인에 대한 신뢰 분야는 67위, 정부정책·계약의 중립성 정도 분야는 65위, 테러위협이 기업비용에 미치는 영향 분야는 64위, 법체계의 효율성(논쟁 해결 측면) 분야는 62위, 사법부 독립성, 회계기준 및 검사 강도의 분야는 각각 58위, 기업 이사회회의 유효성 분야는 57위, 범죄 및 폭력이 기업비용에 미치는 영향 분야는 51위로 나타났다.

나. 4년 전 세계경제포럼에서 평가한 환경 점수를 상기하면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미국의 예일대 환경법연구소와 컬럼버스대 지구환경연구소에 의뢰하여 '05년 1월 말에 환경질 분야 등을 평가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146개 중에 122위로 평가되었다. 내용을 보면 크게 5개 분야에 21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평균 122위보다 낮게 평가받은 2개 분야만 언급하겠다. 환경의 질 분야에 5개 지표이다. 대기질, 수량, 수질, 생물종, 토지 이용 지표에서는 30.6점으로 137위로 나타났다. 환경오염 부하량 분야에서는 6개 지표이다. 대기오염 부하량, 수질오염 부하량, 생태계 부하, 폐기물과 소비 부하, 인구 부하, 자연 자원 관리 분야에서 22.2점으로 146위로 나타났다. 이 분야는 146개국 중 정말로 꼴찌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146위로 평가될 경우 야단일 것인데 환경오염 부하량 분야에서 꼴찌라고 야단이 아닌 것이 문제이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환경오염 부하량에 대한 평가를 보면 환경을 경제적인 측면으로 평가되었다. 아무튼 꼴찌의 환경오염 부하량의 평가가 개선하기 위하여 인재등용이 필요할 것이다. 점점을 해 보자.

3.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개선방안

가. 정책의 변화가 혁신이다.

정책 변화에 대한 인지도 분야는 100위, 정부 규제 부담 분야는 98위로 평가되었다. 이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물론 평가도 잘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유비무환의 정책으로 오히려 평가를 잘 하였다고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책 변화 중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대통령의 관심사항인 4대강 살리기와 녹색성장이 될 것이다. 후자는 이를 위하여 마치 독일의 녹색당과 같은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여당과 야당에서 녹색당의 정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미래의 정치 개혁도 중요하지만 현실 정치를 잘 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는 삼권 중 입법이 삼수변에 갈지(支)로 물 흘러간다는 뜻으로 강을 살리는 것은 정치인들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① 여당과 야당은 행정을 잘 이끌어가는 경쟁자다.

정치를 잘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능력 여부에 달려있다. 따라서 지역 정당에서 정책 정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장은 정치 아젠다를 개헌

을 할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헌과 동시에 현실 정치를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공무원들도 퇴출 제도가 있었지만 국회의원들도 자격미달은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현행 헌법 제64조에 의하면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의원 2/3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비례 대표 국회의원과 데모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인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부터 심사를 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비례 대표보다는 전문 위원을 발탁하여 충원해야 할 것이다.

② 정부 규제 부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 규제 부담 분야는 98위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과거 정부부터 행정 규제를 완화해 왔다. 그리고 요즘은 규제를 혁파한다고 하였다. 그 결과가 98위라고 한다. 모든 일에는 크게 두 가지다. 그것은 사전 예방과 사후 대책이다. 후자는 행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고 전자는 행정 규제를 완화하지 않아도 되는 ‘규제에 대한 해제’를 완벽히 하는 것이다. 이 점이 법상 규정한 허가이다. 허가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으로 예컨대 위천공단 백지화, 동강댐 백지화 등 백지화 사업은 규제에 대한 해제를 하지 못한 사업이다. 그리고 규제 완화는 무허가나 허가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므로 잠정적으로 양성화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마치 법을 위배해서 감방에 있는데 이를 가석방을 하는 원리와 같다. 법을 위배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법을 위배한 사람은 법무부에서 관리하지만 법을 위배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장한다. 법상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경우 장관은 국민으로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나. 녹색성장을 위하여 녹색성장연구소장의 대책

약 10년 전 동구청 환경과장을 할 때 일본에서 박사를 취득한 모교수의 초청으로 환경법 특강을 하였다. 특강의 결론은 개발의 일의 량을 훈련의 땀과 전쟁의 피를 합한 량이라고 가설하였다. 모든 공사는 기초가 튼튼해야 하듯이 환경의 접근에서 환경친화적 개발의 여부가 결정된다.

① 사유재산이 인정된 민주국가에서 대책을

사유재산이 인정된 민주국가에서는 환경이 비경제적으로 개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경제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녹색성장이 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환경은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종이에 해당된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녹색성장이 될 것이

고, 이를 위하여 훈련의 땀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강의 후 초청 이유를 물었다. 일본은 구청 과장의 강의를 듣고 정책 개발을 연구한다는 것이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국민을 섬기는 정부에서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러 가지 중 지난 9월14일 국회회관에서 ‘중도 실용과 정치 개혁을 논한다’ 는 토론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차후에 녹색성장연구소장의 발표도 들어보고 정치 개혁의 소재를 개발하자. 이 점이 지방자치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교육 분야에서도 경영대학(원)의 질 분야에서도 30위에서 14위가 하락되어 44위로 평가되었다. 지역의 경영이 잘 되기 위하여 교수들이 논문을 통하여 하락한 평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② 김해시 하수처리장 건설 계획

약 19년 전에 강서구 근무 당시 물 관리 대책에 대한 추진 사례를 소개하겠다. 강서구의 65%가 개발제한구역이고 그 외에는 도시계획이 되지 않는 일반지역으로 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이다. 낙동강 정화 계획을 수립하여 공문으로 김해시에 제안하였다. 제안의 요지는 가령 하수처리장 건설시 선투자 후충당의 체계가 필요하다. 국채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하수처리장을 조기에 건설한 후 아파트 허가시 정화시설 없이 건설을 하는 것이다. 정화시설을 설치할 경우 100만원이 소요할 경우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95만원을 부담하는 규정을 두고, 건축허가시 정화시설 설치 여부는 선택하여 결정하자는 것이다. 면제된 정화시설 비용의 몫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자는 것이다. 김해시에서 통보된 계획을 보면, '89년 하수처리장 건설 계획은 1일 처리규모는 1만톤으로 49억4천만원 투자 계획을 하였고, 다시 '90년 하수처리장 건설 계획은 1일 9만톤 처리 규모로 410억6천만원으로, 최종적으로 '91년 하수처리장 건설 계획은 1일, 15만2천톤 처리 규모로 822억3천만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③ 하수처리장을 건설한 후에 재원 확보

김해시 조례에 의거 정화시설의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대충 언급해 보면 원인자 부담금은 21톤이하 161만6천원, 30톤은 132만8천원, 50톤은 111만4천원 징수하고 있다. 상기 제안으로 김해시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원인자부담금은 '09. 8. 1 현재 톤당 1,617천 원 부과한다. 작년에 징수한 정보 공개에 의하면, '03년부터 '07년까지 5년 동안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실적으로 총 건축 허가는 2,149건에 원인자부담금은 221억 원('03년 610건 42억여만원, '04년 510건 44억여만원, '05년 423건 58억여만원, '06년 296건 28억여만원, '07년 310건 49억여만원)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기간 외에는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법상 10톤 미만은 법상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환경정책기본법상 오염원인자 부담에 위배 될 것이다. 개선되어야 지방재원이 많이 확보될 것이다.

4. 결 론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대통령이 ‘의치병세(醫治病世)’ 라고 한 말을 한 것과 같이 세상의 병을 잘 진단하여 치유하는 지도자가 필요할 것이다. 마치 결핵도 1기, 2기, 3기로 발전하다가 죽듯이 사회의 병도 1기가 환경문제, 2기가 경제문제, 3기가 위생문제로 대두될지도 모르겠다.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는 따로 국밥이 아니므로 현재에서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는 모두 문제가 되느냐,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는 모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3기인 위생문제가 되느냐 위생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이다. 경영의 현실에서 대통령이 국가경영을 잘 못할 경우 시·도지사가 잘 할 수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잘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생각한다. 인사 청문회 때 장관 후보자들이 과거에 발표한 논문을 모방하여 많이 지적되었다. 우리의 교육이 모방의 시대에서 창조로 시대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0년 동안 환경 공무원을 하면서 책4권과 논문 33편을 발표하였다. 그 중 ‘환경공무원의 말은 소귀에 경 읽기인가?’ 라는 책이 있다. 퇴직한 3급 환경공무원의 말도 소귀에 경 읽기가 될 경우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자.

참고문헌

1. 안경문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녹색성장’ 2008. 12. 8 도서출판 성진
2. 안경문 ‘너 죽고 나 죽자에서 너 살고 나 살자로’ 2005. 10. 5 거북골
3. 안경문 ‘환경 공무원은 소귀에 경 읽기인가?’ 2004. 8. 5 거북골
4. 박만준, 안경문. 국토개발과 환경대책 실무자를 위한 이론안내서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책 제목은 : 늦잠 잔 토끼는 다시 뛰어야 한다. 이문출판사 1993. 4. 30